

[머릿말]

- 존경하는 국민여러분.
- 저는 오늘 우리경제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대우조선해양에서 벌어지고 있는 불법점거 중단을 간곡히 호소 드리기 위해 관계부처 장관들과 이 자리에 섰습니다.
 - 경남 거제시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의 1번 도크(선박 건조대)는 초대형 선박 4척을 동시에 건조할 수 있는 세계 최대 규모로 대한민국 조선업 경쟁력의 상징과 같습니다.
 - 이곳이 지난달 22일 일부 협력업체 근로자의 불법점거로 멈춰 섰고, 건조를 마치고 조만간 선주에게 인도돼야 할 초대형 원유운반선은 발이 묶였습니다.
- 지난 주(7.14, 목) 고용노동부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께서 불법점거 중단과 대화를 촉구하는 담화 이후에도 대화는 이뤄지고 있지만, 아직까지 불법점거는 계속되고 있습니다.

[대우조선해양 기업 정상화 필요성]

- 대우조선해양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조선업 장기 불황과 분식회계 사태로 경영난을 겪으며 '15년 이후 7.1조원의 대규모 국민 혈세를 투입하며 구조조정을 추진해왔습니다.
- 하지만, 여전히 500%가 넘는 높은 부채비율(547%, '22.3)과 작년 1.7조원, 올 1분기 4,700억원에 달하는 대규모 적자를 기록하는 등 상황은 매우 어렵습니다.

- 최근 조선업 경기회복과 수주 확대를 발판 삼아 기업 정상화를 위한 뼈를 깎는 노력이 절실한 상황에서
 - 이번 불법점거 사태는 대우조선해양 및 협력업체 대다수 근로자와 국민의 기대에 찬물을 끼얹고, 오랜 불황에서 서서히 벗어나고 있는 한국 조선산업이 지금껏 쌓아올린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는 무책임한 행위입니다.
- 특히 친환경·디지털 등 조선업 패러다임 전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조선해양 강국의 초격차를 지키기 위해 노사 모두 한 배를 탄 공동운명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.

[정당한 노동권 보장]

- 우리나라는 ILO 핵심협약 비준 국가로 선진국 수준의 결사의 자유가 보장되고 근로자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충분히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.
 - 이번 사태는 일부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불법행위로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시키려 동료 근로자 1만 8천여 명의 피해와 희생을 강요하는 이기적 행동입니다.
 - 철지난 폭력·불법적 투쟁방식은 이제 일반 국민은 물론 대다수 동료 근로자들의 지지를 얻지 못합니다.
- 정부는 그간 일관되게 밝힌 바와 같이 노사자율을 통한 갈등해결을 우선하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것입니다.
 - 주요 업무시설을 배타적으로 점거한 하청노조의 행위는 명백한 위법이며, 재물손괴 등 형사처벌과 손해배상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.

* 사용자의 점유를 배제하여 조업 방해 금지(노조법 §37③), 생산, 기타 주요업무시설 등 점거 금지(노조법 §42①), 재물손괴 등(형법 제366조), 특수주거침입(형법 제320조)

- 지난 7.15(금) 사법부도 집회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판단을 통해 “정당한 쟁위행위의 범위를 벗어났다”며 이례적으로 불법성을 명시*했습니다.

* 사측의 집회금지가처분 신청에 대해 '조선소의 제1독을 폐쇄하거나 배타적으로 점거하는 행위' 등에 대해 신청 인용

- 지금까지 국민들께서 노조가 대화의 장으로 나오길 충분히 참고 기다렸습니다. 이제는 정말 불법행위를 끝내야 합니다.

[마무리]

- 최근 우리경제는 물가불안이 지속되며 국민들의 시름이 깊어지는 가운데 급격한 금리인상, 자산시장 불안, 실물경제 둔화 등 하방위험과 불확실성도 확대되고 있습니다.
- 저소득층·청년·중소기업 등 취약부문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지만 험난한 길이 언제 끝날지 예단하기 어렵습니다.
- 지금은 모두가 합심해 함께 고통을 분담하며 경제 살리기에 매진해야 할 때입니다.
- 노사간에 대화를 통해 합리적 대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지금과 같은 불법적인 점거 농성을 지속한다면 정부도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대응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.
- 정부는 적극적 중재노력과 함께, 취약 근로자 처우개선 등 필요한 정책적 지원에 힘쓰겠습니다.
- 노조도 기업과 동료 근로자 전체의 어려움을 헤아려 불법행위를 즉시 중단하고, 조속히 타결하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.

7월18일

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추경호,
법무부 장관 한동훈,
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,
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창양,
고용노동부 장관 이정식,
국무조정실장 방문규